〈제 579호〉

-주간- 광주 경영계

KEF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관세법인 더블유(대표 관세사 정민규)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은 관세법인 더블유의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신속한 답변이 이뤄진다.

보해양조

◈ 창립 70주년 기념 이벤트 호응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송가인의 잎새레터' 이벤트를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전남 500여개 업소에 있는 잎새레터에 잎새주와 보해양조, 송가인과 우리동네 자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손편지를 써서 업소 우편함이나 일반 우체통에 넣게 되면 접수된 사연 중 추첨을 통해 잎새주 전속모델 송가인 씨가 직접 답장을 쓸 예정이다.

또한 보해는 전라남도 곳곳에서 생산된 특산품과 송가인 모자 등 푸짐한 경품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보해양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Ⅱ. 광주경총 소식

<제1482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4월24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연회장에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 <정상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본경제>란 주제로 제148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일본경제를 흔히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들 한다. 부동산 등 자산가액이 폭락하고 거품이 붕괴되면서 경제성장이 멈춘 시간을 말한다. 이런 장기적인 경기불황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 대신에 금융지원만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하려 했다.

201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무역적자국으로 전환된 상황에 아베정권이 집권하게 된다. 아베노믹스를 한마디로 하면, 지속불가능한 마약성 처방, 혹세무민의 논리다.

19세기말부터 일본경제 도약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노동력과 물자를 착취 약탈하여 경제적 부를 누렸던 일본, 2차대전 패배로 경제위기에 몰렸지만 6.25전쟁으로 다시한번 제조업 도약을 한 일본, 그리고 70,80년대 한국경제 부흥기때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해서 다시 수출하는 한국의 산업구조 덕을 많이 본 일본이다. 이제 일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수를 써도 경기침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자 외부 요인을 생각한 집권세력이 들고 나오는 게 주변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평화헌법 9조 개정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되어 이 장기적인 침체를 깨기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 핵위협을 명분삼아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도 생긴다. 지금 한일간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전쟁 등을 큰 틀에서 보면 아베의 이런 야욕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국 일지(4. 27 ~ 4. 29)

4. 27 (월)	● 광주전남중기청 여성기업 심사	4. 29 (수)	● 광주형일자리 노동계 복귀 환영 성명서
4. 28 (화)	● 고용센터 운영위원회 ● 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심사		

1. 노사 동향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노총(3. 25)과 민주노총(3. 26)을 방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대화 채널'을 통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국무총리는 양 노총 위원장(한국노총 4. 17, 민주노총 4. 18), 경총 회장 및 대한상의 회장과 면담(4. 20)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관련 논의

- 사회적 대타협 의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경제주체들의 고용유지 노력, 정부지원 확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의제 및 논의 일정은 추후 조율 예정

-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민주노총은 ▲고용보장, ▲취약계층 생계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한 '노사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

※ 민주노총은 4. 16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노정 또는 노사정 비상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 설정

- 경총은 사회적 대타협은 현재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전달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대책에 집중

○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4. 13)에서 일자리 지키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

- 고용유지 기업에 적극적 대책 강구, 특수형태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 공공사업을 통한 긴급 일자리 마련 등 지시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의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 지원대책 지속 추진

[참고] 고용부, 고용안정 지원대책 주요 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
-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
- ▲ 고용위기지역(7개 지역)에 대한 기간 연장
  ※ 7개 고용위기 지역 :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 ▲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 적극 유도 및 지원금 지급
- ▲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및 요건 완화

■ 고용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신속한 인가 추진

○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치료, 마스크 제조 및 방역용품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 신청 증가

※ 연도별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현황(신청건수/인가건수) :
'17년(22/15) → '18년(270/204) → '19년(967/910) → '20년3월11일(581/506)

○ 경총은 「국무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3. 26)에서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인 인가 필요성 강조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치료·진단 관련 기업,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등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인가하도록 지시(4. 6)

■ 노동계는 구조조정 반대 활동에 주력 계획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와 고용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 노총은 구조조정 반대를 핵심사업으로 추진

- 한국노총은 산하에 '코로나19 고용위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전국 지역본부로부터 구조조정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향후 산별조직과 함께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 등 진행 방침

-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위한 비상투쟁본부'로 전환(4. 16 중앙집행위원회)했고,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기획투쟁, 정치권·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한 이슈화 추진